



진보신당 장애인공약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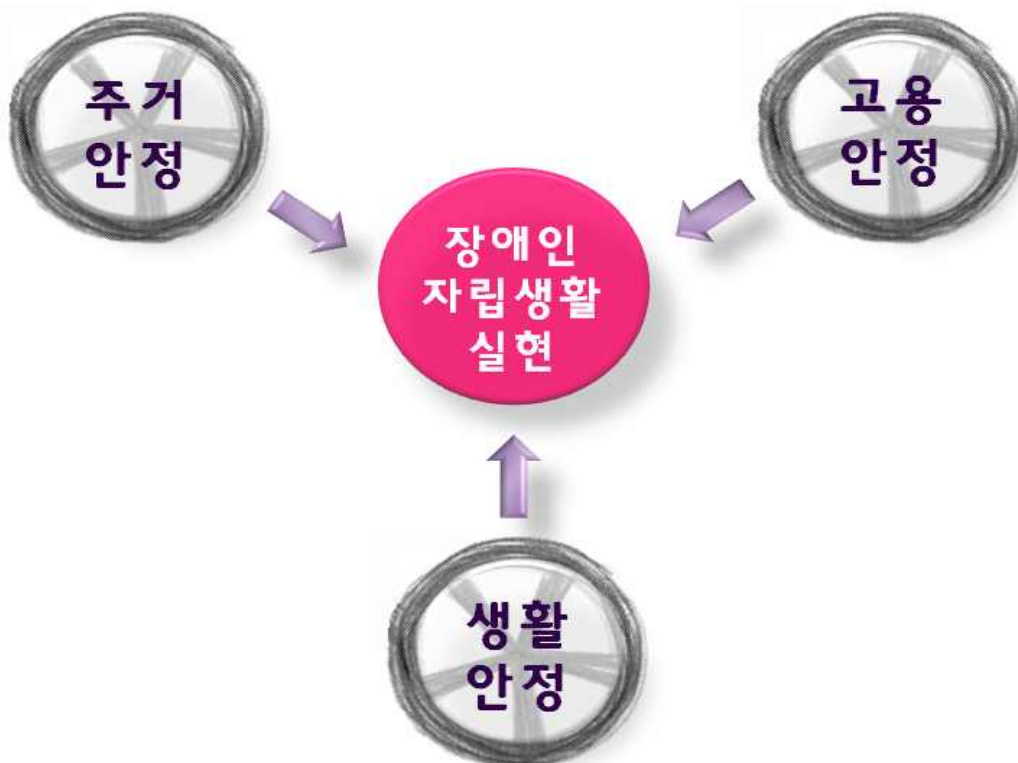
진보신당 세바퀴 공약의 목표

“장애인의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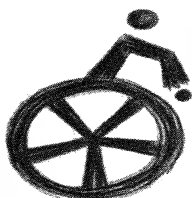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명.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걷다 보면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갇히고, 집안에 갇혀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게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1위, 산재 1위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 이 많아지는 세상, 장애인 모두가 그러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보신당의 꿈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장애인 10대 공약

1.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해, 장애인 세입자를 꺼리는 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2.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4.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6. 의무고용할증제(더블카운트) 실시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7. 시군구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를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8.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과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 장애아동지원조례를 만들어,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세바퀴 공약
설명 자료



○ 현황

- 장애인 중 29.4%가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상황임. 특히, 연령이 낮거나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전세나 월세에 사는 비중이 더 높음.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가 (%)	53.9	55.4	62.7	74.6	59.8	67.1	65.3
전세 (%)	20.7	16.1	13.0	10.0	13.8	12.4	12.8
보증금있는 월세(%)	17.3	19.4	16.3	7.0	16.3	12.7	13.6
보증금없는 월세(%)	2.5	3.2	2.3	1.4	2.5	2.1	2.2
사글세 (%)	1.2	0.6	1.0	0.7	0.8	0.8	0.8
무상 (%)	4.3	5.3	4.7	6.3	6.8	4.9	5.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명)	79,326	382,423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반면, 주택 임대인의 경우 장애인 세입자를 기피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회피로 인해 집없는 장애인들은 이중의 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음.

○ 추진방안

- 지자체가 전세 주택 직접 매입 및 임대 → 지자체가 주거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작성 → 이에 따라 주택개조 사업 실시 → 지자체가 집주인이 되어 장애인에게 전세 주택 공급
- * 서울시의 경우, 월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미 장애인전세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인 이하의 경우 4천만원, 3인 이상일 경우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줌.

○ 예산

- 장애인 1가구당 5천만원 지원
- 시도별로 매년 100가구씩 추가 지원
- 1개 시도당: 100가구×5천만원=50억원 / 16개 시도: 1,600가구×5천만원=800억원



○ 현황

- 장애인의 19.0%가 집구조에 대해 ‘매우+약간 불편’하다고 답함.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인이 ‘매우+약간 불편’이 28.7%로 가장 높음.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편리	18.0	17.2	18.7	23.4	24.7	23.9	29.9	16.5	25.6	21.8	21.6	31.6	18.6	29.3	15.8	19.3
약간 편리	34.7	27.2	36.9	36.0	37.9	34.8	32.3	36.1	35.5	34.1	38.9	32.7	37.8	37.7	32.9	34.4
보통	27.0	26.8	30.4	25.4	26.1	29.0	23.2	33.8	23.2	29.0	22.2	25.7	27.0	21.1	30.9	27.4
약간 불편	14.9	20.8	10.7	12.3	9.7	10.3	9.8	10.8	13.1	12.8	13.7	7.7	11.3	8.9	15.9	14.2
매우 불편	5.4	7.9	3.4	3.0	1.6	1.9	4.7	2.8	2.6	2.3	3.5	2.3	5.3	3.0	4.5	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여성, 중증, 고령의 장애인일 경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 여성의 경우, ‘약간 불편+매우 불편’이 21.0%로 남성의 17.5%에 비해 높게 나왔고,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일수록 편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옴.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편리	21.1	16.6	23.3	23.7	20.1	15.6	18.1	19.7	19.3
약간 편리	34.0	35.0	42.1	33.5	33.5	35.0	31.6	35.3	34.4
보통	27.4	27.4	20.5	27.0	27.5	28.1	27.4	27.4	27.4
약간 불편	12.8	16.1	11.5	12.3	14.2	15.4	16.5	13.5	14.2
매우 불편	4.7	4.9	2.6	3.5	4.6	5.8	6.4	4.2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많은 장애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장애인의 52.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단독주택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④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임.

○ 추진방안

-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무상으로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및 사후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정 및 관리감독.
- 부엌, 문턱, 화장실, 현관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종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예산

- 현재 중앙정부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곳당 38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역시 필요함. 우선,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380만원 지원.
- 1개 시도당: 100가구 × 380만원 = 3억 8천만원
- 16개 시도: 1,600가구 × 380만원 = 60억 8천만원



○ 현황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50~99만원이 24.8%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 역시 12.3%로 나타나는 등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에 해당함.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구분	전체 (%)	추정수(명)	누적수(명)
50만원 미만	12.3	262793	262793
50~99만원	24.8	529858	792651
100~149만원	16.3	348254	1140905
150~199만원	11.2	239291	1380196
200~249만원	10.4	222199	1602395
250~299만원	5.9	126055	1728450
300~349만원	6.3	134601	1863051
350~399만원	4.1	87598	1950648
400~499만원	4.1	87598	2038246
500만원 이상	4.4	94007	2132253
계	100.0	2136526	2132253
전국추정수	2,136,526	2136526	
평균	181.9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소득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의 가구 중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경험이 9.0%에 달함. 그러나 정작 정부의 전세자금지원은 0.8%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집세를 내지 못한 경험 및 전세자금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	있다	13.6	9.1	10.5	4.8	8.5	9.1	9.0
	없다	86.4	90.9	89.5	95.2	91.5	90.9	9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699	151,459	285,442	148,378	175,047	448,432	618,978
전세자금(융자)지원 이용여부	있다	1.7	0.7	1.2	0.3	1.0	0.7	0.8
	없다	98.3	99.3	98.8	99.7	99.0	99.3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326	382,425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추진방안

- 국민주택기금에서 현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6천만원까지 지급 / '영세민전세자금'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 이에 추가해, 지자체와 은행이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보증을 하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자체가 대출에 소요되는 이자만 지원시 예산 소요는 거의 없음.

○ 예산

- 1개 시도당: 100가구 지원시 \times 6천만원 \times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3억원
- 16개 시도: 16,00가구 \times 6천만원 \times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48억원
-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반환수 가능. 대출 이자만 지원.



일자리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41.1%이며,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2.5배 정도 높음.
- 취업장애인의 임금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전체근로자 255만1천원(비농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45%에 불과한 상황.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일 1일 평균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각국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전부임.
- 따라서 지자체에서 수주하는 위탁사업 입찰시 심사 기준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과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참고로 2007년 말 현재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80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60건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44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광역(시) 249건, 광역(도) 111건, 기초(시) 1307건, 기초(군) 276건, 기초(구) 857건.

○ 추진 방안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조례 제정: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ex.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지자체 및 공기업 발주사업 참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 예산: 별도 예산 소요 없음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 현황

- 일반고용의 경우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할당제를 도입함.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의무고용해야 함.
- 그러나 의무고용율 3%는 한국 장애인출현율 5%, 유엔 인구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3%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 현황]

순위	지방자치단체	적용대상공무원 (명)	의무인원 (명)	장애인공무원 (명)	고용률(%)
1위	광주광역시	5,514	111	188	3.41
2위	제주특별자치도	4,258	86	140	3.29
3위	전라북도	13,964	280	453	3.24
4위	전라남도	17,693	354	552	3.12
5위	대구광역시	9,178	184	280	3.05
6위	경상북도	21,144	423	642	3.04
7위	강원도	14,008	281	414	2.96
8위	충청북도	10,758	216	316	2.94
9위	충청남도	14,611	293	419	2.87
10위	대전광역시	5,661	114	157	2.77
11위	울산광역시	4,506	91	121	2.69
12위	경상남도	19,236	385	492	2.56
13위	경기도	37,585	752	959	2.55
14위	인천광역시	10,828	217	266	2.46
15위	부산광역시	13,706	275	309	2.25
16위	서울특별시	41,417	829	843	2.04
	합 계 (16개)	244,067	4,891	6,551	2.68

* 2008.12.31 기준.

*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 2009. 4. 15



○ 추진 방안

-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 예산

-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의 할당제이기 때문에 별도 재원 필요 없음.



○ 현황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중증장애인 비중은 매우 낮음. 2007년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17.9%에 불과한 상황임.

[민간부문 의무고용인원 중 장애정도별 비율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무 고용	경증	87.9	86.5	84.5	83.9	82.4	81.2	81.6	82.1
	중증	12.1	13.5	15.5	16.1	17.6	18.8	18.4	17.9
등록 장애	경증	48.2	50.5	52.0	54.2	55.6	56.9	58.0	59.1
	중증	51.8	49.5	48.0	45.8	44.4	43.1	42.0	40.9

*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04.

- 게다가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중 성별 비율도 여성이 12.93%로 매우 낮은 상황임.

[의무고용인원 중 성별 현황]

계	남	여
89,664명 (100.0%)	78,079 명 (87.07%)	11,585 명 (12.93%)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04.

○ 추진방안

-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을 고용했을 때 더불카운트제도를 도입하여, 경증장애남성을 1명으로 했을 때 중증장애남성 및 장애여성은 1.25명, 중증장애여성은 1.5명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

○ 예산 : 예산 소요 없음



시군구마다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를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33.8%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 부담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임.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정부 자료를 보면,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3만명에 그침. 이는 등록장애인 213만명의 1.5%에 불과한 수치로, 앞으로도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확대가 매우 필요함. 그러나 정부는 2009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수가 증가하자, 오히려 신규 신청자를 중단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함.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8만원까지 인상시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상황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현황」

시도명	2008년	2009년			2010년		
	이용자 (명)	이용자 (명)	증감 (명)	증감율 (%)	이용자(추계) (명)	증감 (명)	증감율 (%)
서 울	4,306	6,370	2,064	47.9	6,700	330	5.2
부 산	1,659	2,269	610	36.8	2,500	231	10.2
대 구	997	1,673	676	67.8	1,780	107	6.4
인 천	1,127	1,581	454	40.3	1,700	119	7.5
광 주	834	1,054	220	26.4	1,400	346	32.8
대 전	744	1,134	390	52.4	1,400	266	23.5
울 산	304	418	114	37.5	470	52	12.4
경 기	3,275	5,063	1,788	54.6	5,200	137	2.7
강 원	564	778	214	37.9	840	62	8.0
충 북	703	948	245	34.9	1,020	72	7.6
충 남	711	1,035	324	45.6	1,110	75	7.2
전 북	901	1,027	126	14.0	1,100	73	7.1
전 남	1,062	1,305	243	22.9	1,400	95	7.3



경 북	953	1,303	350	36.7	1,360	57	4.4
경 남	1,070	1,507	437	40.8	1,600	93	6.2
제 주	288	353	65	22.6	420	67	19.0
합계	19,498	27,818	8,320	42.7	30,000	2,182	7.8

* 2009년 12월말 기준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2010. 02.

-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종사자 실태도 매우 심각함. 종사자들의 월평균임금을 보면 63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4대보험 가입율은 54.5~69.0%에 머물러 있음.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금지급과 달리 '사람'대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대인서비스임. 이 때문에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곧바로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음.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 임금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시도명	종사자수	종사자평균 임금(월/원)	4대 보험 가입현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18,507	631,332	54.5%	57.1%	69.0%	69.0%
서 울	4,784	584,508	47.1%	49.7%	58.9%	63.3%
부 산	1,532	749,555	57.7%	61.4%	70.1%	71.3%
대 구	1,152	639,407	69.3%	72.0%	82.3%	85.8%
인 천	1,051	700,539	55.0%	57.3%	65.5%	76.8%
광 주	855	641,628	26.0%	26.4%	27.0%	26.9%
대 전	829	616,274	59.7%	61.5%	76.2%	79.1%
울 산	281	362,556	8.2%	8.2%	8.2%	8.5%
경 기	3,078	578,512	49.3%	52.2%	62.0%	64.5%
강 원	458	743,891	69.2%	70.3%	73.4%	74.5%
충 북	587	690,565	57.2%	61.5%	65.1%	68.8%
충 남	660	584,395	68.8%	71.1%	91.1%	91.5%
전 북	574	603,684	68.8%	71.4%	76.3%	76.8%
전 남	736	669,591	67.5%	69.2%	78.3%	79.8%
경 북	782	677,728	69.7%	73.0%	85.4%	86.7%
경 남	907	724,257	67.6%	71.1%	80.6%	81.4%
제 주	241	691,270	64.3%	66.4%	68.0%	72.2%

* 2009년 12월말 기준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2010. 02.



○ 추진방안

- 공공부문 50%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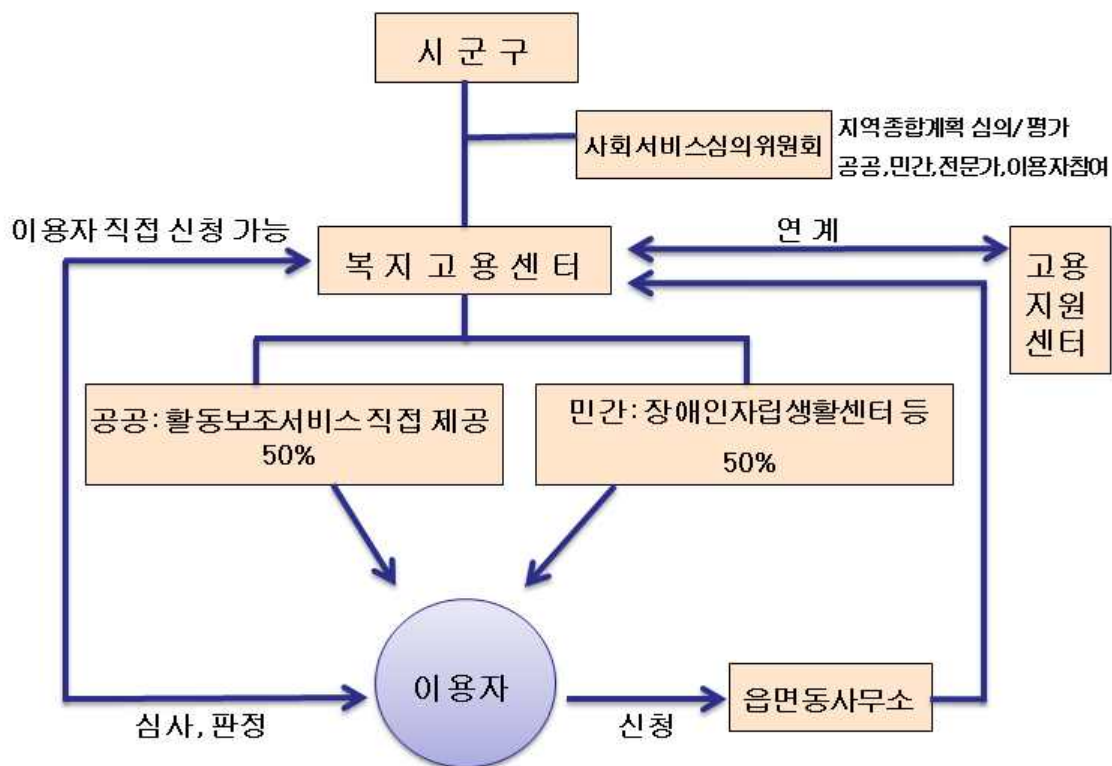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내기 어렵고,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고가의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서비스가 아예 생산조차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수립된 사회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연봉 2천만원의 관창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고, 적어도 연봉 2천만원 일자리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임금 양극화를 막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조치임.

- 시군구마다 복지고용센터 설립

장애인 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 활동보조서비스 직접 공급 50% 및 민간부문 관리감독 강화



○ 예산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공약에 이미 예산 포함)

구분	개선안	비고
지원기준	장애인 14.5%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시 거의 남의 도움 필요한 장애인이 5.4%, 대부분 필요가 9.1%임. 이를 1단계, 2단계 지원으로 나눠서 지원(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
대상수	309,898명	1단계: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4% ⇒ 장애유형 고려 115,410명 2단계: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9.1% ⇒ 장애유형 고려 194,488명
지원시간	1단계: 240시간/월 2단계: 120시간/월	1단계: 115,410명 / 1일 평균 8시간 이용 /월 240시간 2단계: 194,488명 / 1일 평균 4시간 이용 / 월 120시간 *지원시간 기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급봉사자 활용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도움받는 시간이 8.7시간으로 나타남. 이를 기준으로 1단계 중증장애인은 8시간, 2단계 중등도 장애인은 2분의 1인 4시간 지원으로 산정
일자리수	244,196명 1단계: 132,527명 2단계: 111,668명	- 1단계: 132,528명 인력 필요=(1단계 115,410명×월 240시간)÷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 2단계: 111,668명 인력 필요=(2단계: 194,488명× 월 120시간)÷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임금	연봉 2,000만원	132,527명(1단계 우선 지원) * 추후 2단계까지 확대
인프라	시군구 복지고용센터	복지고용센터에서 50% 지원 / 민간인프라 50% 활용
필요예산	2조6,505억원	- 임금: 132,527명(1단계 우선 지원)×연봉2,000만원 =2조6,505억원 - 2010년 현재 정부 예산 1,971억원임. 이는 운영 예산으로 사용. - 본인부담금 필요 없음.



○ 현황

- 핵가족, 맞벌이 등의 증가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변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 도움을 받기 더욱 곤란한 상황.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으로는 친정식구(56.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댁식구(16.9%)였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1.8%나 차지함.
-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산후조리원 및 가정방문 산모도우미 등의 서비스업이 팽창하고 있으나, 2주간 이용시 150만원~300만원 수준으로 소득이 없는 장애여성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장애여성 출산 전·후 산후조리 도우미]

구분	전체
남편	5.8 %
친정식구	56.9 %
시댁식구	16.9 %
복지기관	3.7 %
산후 조리원	0.7 %
산후 도우미	3.6 %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 했음)	11.8 %
기타	0.7 %
계	100.0 %
전국추정수	65,9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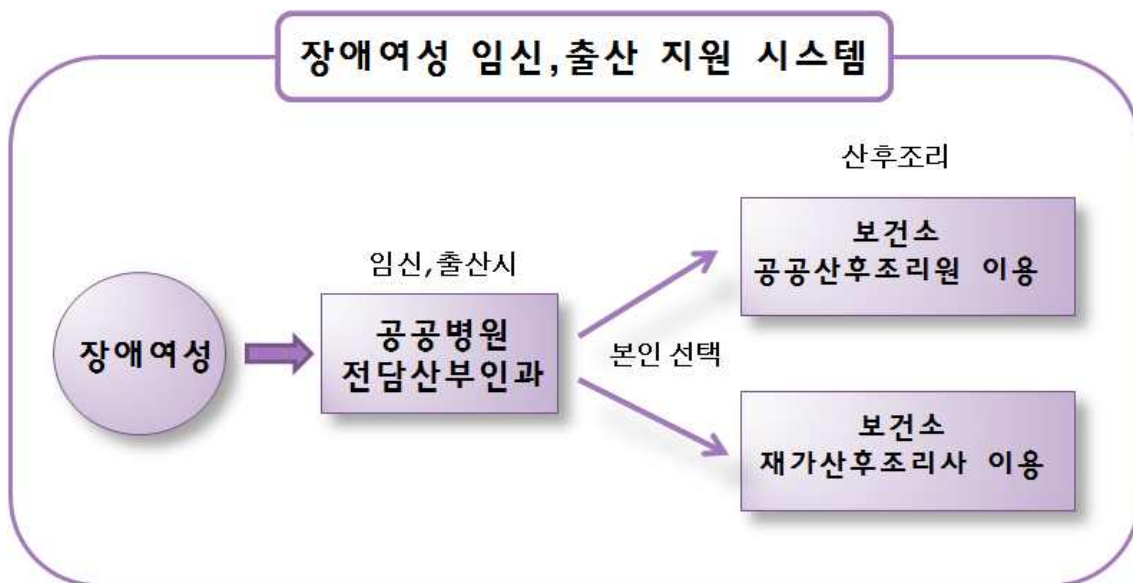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산후조리서비스 8.5%, 임신출산 전문병원 8.1%, 출산비용 지원 14.8%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가 31.4%를 차지함. 이 밖에도 ‘가사도우미’(17.6%),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등이 있음.



○ 추진방안

- 공공병원에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장애여성 우선 입소 지원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공적인 출산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전체 출산 가정 60%까지 공공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장애여성 우선 입소
- 재가산후조리사 파견
: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기 원할 경우, 재가산후조리사 파견. 보건소마다 2인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두어 산후조리사를 관리하고 산모 및 신생아가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여성의 경우, 3주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여성
1인에 재가산후조리사 2인 파견.
- 보건소 장애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병행
: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및 장애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도입,
사전사후 지원제 도입



○ 예산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공약에 예산 포함, 별도 추계 불필요)

- 1개 시군구당 매년 15억원 운영비 필요
- 3,900억원 = 15억원 × 260개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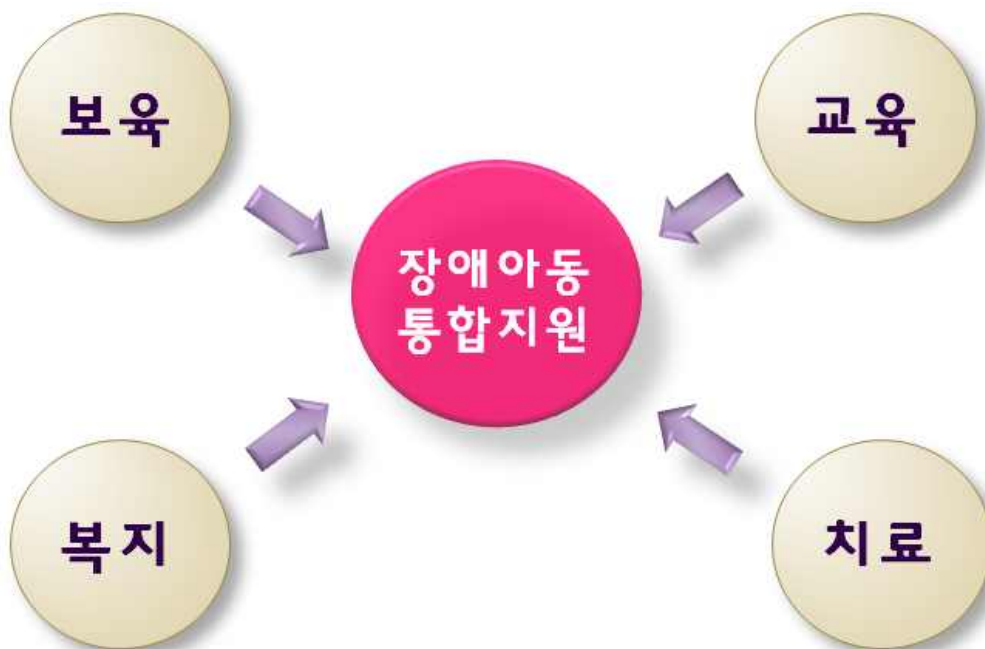


○ 현황

- 장애아동의 욕구는 장애예방, 치료, 재활 뿐만 아니라, 복지, 보육, 교육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남.
- 반면, 관련 서비스는 교육청,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자체 내에서도 보건, 복지 분야 역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추진방안

-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및 병원,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 **예산:**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기에 많은 예산 소요 없음



■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아 본 장애인은 25.6%에 그쳐 4명 중 1명 정도만이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체계가 병원 및 보조기구업체 등 공급자 중심의 단순 공급 위주의 체계이며, 상담, 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 설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장애인도 32.2%에 달해, 현재의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8%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현재 공급되는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힌 것은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 서비스’ (27.8%), ‘급여 비용의 인상’ (22.8%), ‘지원 품목의 확대’ (18.8%),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14.7%) 등이었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구분	전체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	27.8 %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4.7 %
지원품목의 확대	18.8 %
신청 및 보급절차의 간소화	9.9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5.8 %
급여비용의 인상	22.8 %
기타	0.3 %
계	100.0 %
전국추정수	907,286 명

*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추진방안

- 장애인보조기구 상담 및 판매, 임대, 관리, 수리 및 개조 등 맞춤형 보조서비스 제공.
-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 인터넷 정보포탈을 구축해 집에서 손쉽게 정보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예산

- 서울시 재활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장애인 1인당 평균 43만원 지원.
- 1개 시도당: 1,000명 이용시 × 43만원 = 4억3천만원 소요
- 16개 시도: 16,000명 이용시 × 43만원 = 68억 8천만원 소요

■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 구축

○ 현황

- 현재 시청각장애인수는 42만명임.

시도명	시각	청각	합계
강원도	8,075	8,863	16,938
경기도	40,855	36,815	77,670
경상남도	14,464	14,030	28,494
경상북도	15,053	14,504	29,557
광주광역시	6,257	6,577	12,834
대구광역시	10,794	8,705	19,499
대전광역시	6,207	5,678	11,885
부산광역시	16,196	11,535	27,731
서울특별시	37,003	33,680	70,683
울산광역시	4,093	5,002	9,095
인천광역시	11,047	10,427	21,474
전라남도	13,517	14,500	28,017
전라북도	11,032	11,197	22,229
제주특별자치도	3,682	2,856	6,538
충청남도	10,881	10,980	21,861
충청북도	7,725	7,975	15,700
합계	216,881	203,324	420,205

* 복지부, 「2007년 12월말 전국장애인 현황」.

- 현대는 정보화시대임. 따라서 정보 접근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들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TV, 인터넷 문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임.



○ 추진방안

- 지자체와 해당 출판업자 협약으로 등록간행물 DB 구축 및 제공
- 수화통역사 지원, 화상전화기 등 구축
- 각종 시청각 보조기구 지원 및 임대, 정보 제공
- 민간기업 시청각 홈페이지 구축 유도 및 공공기관 정보접근권 관리감독



[진보신당 세바퀴 공약 예산 추계]

사업명	예산	세부내역
장애인 전세주택 도입	8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1가구당 5천만원 지원 - 시도별로 매년 100가구씩 추가 지원 - 1개 시도당: 100가구×5천만원=50억원 / 16개 시도: 50억원×16개=800억원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	60억 8천만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앙정부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시 380만원 지원. ⇒ 지자체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 - 1개 시도당: 100가구× 380만원=3억8천만원 소요 - 16개 시도(1,600가구 지원) × 3억 8천만원 = 60억 8천만원 소요
저금리의 장애인 전세대출	4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전세자금대출 6천만원까지 지급 - 1개 시도당: 100가구 지원시 × 6천만원 ×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3억원 - 16개 시도: 100가구 × 6천만원 ×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16개 시도 = 48억원 -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재환수 가능. 대출 이자만 지원시 예산 소요는 거의 없음.
활동보조	2조6,50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15,410명 / 1일 평균 8시간 이용 /월 240시간 - 필요인력수: 132,528명=(1단계 115,410명×월 240시간)÷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 활동보조인 임금: 132,527명×연봉2,000만원=2조6,505억원
공공산후조리원	3,9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시군구당 매년 15억원 운영비 필요 - 15억원 × 260개 시군구 = 3,900억원
맞춤형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68억 8천만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활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장애인 1인당 평균 43만원 지원 - 1개 시도당 1,000명 이용시 × 43만원 = 4천3백만원 소요 - 16개 시도: 1,000명 × 43만원 × 16개 = 68억 8천만원 소요
합계	977억6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 2조6,605억원, 공공산후조리 3,900억원은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공약으로 이미 제시 -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 장애인복지예산으로 확대

